

OPINION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특별기고

학교 안전법과 졸속 대처

문종민

전 광주체육고 교장



텀 비었던 교실과 운동장이 아이들의 환호성과 웃음으로 가득한 3월이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교실이 바뀌는 등 학생들의 일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 스트레스도 받는 가운데,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도 긴장과 걱정으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봄이 되면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수련회 등 야외 체험학습이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예정했던 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학사일정 수정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강원 지역 교사들이 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

안전조치의 ‘완벽한 이행’의 불명확한 기준,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 전가, 교사 보호 장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최소한 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양한 학

습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의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체험학습 시 ‘안전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교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아울러 체험학습 관련 법적 면책 범위를 확대해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책은 학교 현장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안전한 교외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 채용을 검토하며, 업무협의회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이고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대책이다. 즉 교내 실시 권고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인식돼 체험학습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잃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성 추구’라는 교육감의 철학에도 반하는 조치다.

다음으로 보조 인력 추가 채용은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보조 인력이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느냐의 문제다. 단순한 보조 인력 추가보다,

전문적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더구나 ‘검토’라 함은 생각뿐이라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의회 및 한시적 지원 확대’는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업무협의회는 행정적인 논의일 뿐 법적 책임을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지원 확대 역시 한시적이므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지속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청은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법 및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법적 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최소한 안전 대책 매뉴얼을 준수했을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 등 일반 보조 인력 보강은 교사들에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인력 그 자체가 위험 요소다. 즉 응급구조사, 안전관리 전문가 여야 하고 학생 규모와 상관없이 동행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안전 전문가가 배제된 대안을 내밀지 말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불가항력적 경우는 사고대처 능력이 없는 교사들이 다듬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법률 및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하고 배상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행할 생각은 없는가.

사설

광주·삼성전자 상생·동반성장해야

삼성전자가 광주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의 멕시코 이전계획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는 멕시코로의 냉장고 구모델의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컨베이어 벨트 등 생산시스템 혁신에 대대적 투자를 하면서 프리미엄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어제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당시 광주공장 부사장은 ‘일단 이전 계획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급등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던 냉장고 구형모델(RF-8000B) 2종 제품 20만~30만대를 올 상반기부터 멕시코에서 생산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강화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데다 국내 경기 침체,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출감소로 인한 줄도산을 우려했던 지역 협력업체들과 지역 경제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실 삼성전자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다. ‘생활가전산업’의 경우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에 이어 매출액이 두번째로 높은 주력 산업군으로 가전산업 매출은 지난 2021년 기준 광주 제조업 생산의 16% (약 6조43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약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완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1·2차 협력사만 50여곳, 하도급 업체까지 더하면 100여곳에 달해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광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셈이다.

광주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강화된 미국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산업 등을 종합 관리하는 ‘수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단’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젊은층 집중... 지원책 절실

광주·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60% 가까이가 20~30대인 젊은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인정한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월 19일 기준 1315명(광주 375명, 전남 9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한 피해자 수 1244명(광주 348명, 전남 896명)보다 71명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광주·전남 모두 20~30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서는 30대 피해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116명), 40대(34명), 50대(19명), 60대 이상(13명) 순이었다.

전남 역시 30대 피해자가 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77명)가 그 다음을 이었다. 40대(268명), 50대(173명), 60대 이상(96명)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지역 내 피해자 중 20~30대가 59.0%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젊은 층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을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하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2만7372명인데 이중 30대(1만3350명), 20대(7092명) 등 20~30대가 2만44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4.6%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가 젊은층에 몰려서 인지 피해액 규모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41.87%), 1억원 이하(42%) 등 83.7%가 2억원 이하였다. 또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 비아파트에서 69.3%가 발생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이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받기까지는 요원하다.

사회초년병인 20대와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30대에 전세사기가 몰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고

김정욱

더민주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퇴하십시오”

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히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특수수사팀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의 결정으로 최종적 항고가 포기된 것이 드러났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의 통화에서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 항고했을 것이다”며 “현직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나라면 즉시 항고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철완 광주 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공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 총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내란 수괴에 대한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란을 명령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반면, 내란 명령을 이행한 그의 부하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376건의 압수수색, 기소당한 횡수 총 6건, 소환 조사 약 50시간, 법원 출석 100회 이상, 재판 시간 약 800시간에 달하는 이재명 당 대표자에 대한 처우와는 사뭇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중립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인 심우정 검찰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중립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검찰 총장이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하수인이 돼버렸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참으로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심우정 검찰 총장의 이런 어리석고 독선적인 판단 때문에 국민의 분열은 심화됐고, 정치적 혼란 역시 더 심화됐다.

또 검찰 내 정치 색깔론이 가중됐고, 검찰 내부 역시 분열됐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커졌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졌다.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 사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한다 말인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판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 민생은 파탄 났고 국민의 분노는 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그의 하수인 심우정 검찰 총장,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하지 말고 즉시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최근 소셜미디어와 랜덤 채팅 앱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이를 이용해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범죄가 교묘하게 진행되며,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게임, SNS, 채팅 앱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점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민감한 사진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피해자가 요청을 거부할 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용 유무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인 착취가 이뤄진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78.6%가 10대 청소년이다.

특히 13~15세 피해자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연령대가 또래 관계에 민감하고, SNS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재홍 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경장

취재수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관심을

송대영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많았고, 순천시(7면), 광주시(3면), 나주시(2면), 해남군(2면), 장흥군(1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마움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지만 이를 알지 못한 시민이 많은 상황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있었다. 광주와 전남지역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올해 1월 기준)는 각각 1만6018명, 2만 2344명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에서는 설·추석,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보훈 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시민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관심이 국가유공자 예우의 첫걸음은 아닐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추모행사를 개최하며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모든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를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제정했지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올해 1월 기준 광주시,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순천시, 여수시, 보성군, 고흥군 등 10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주차구역은 총 26면으로 영광군이 11면으로 가장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